

청원계시판 도배한 조국논란 靑 ‘가짜뉴스’ 비공개 처리

조국 사퇴·딸 학위 취소 등 청원 쇄도
靑 “중복·명예훼손 경우 임의 삭제”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목소리가 거세져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 후보자 딸의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청원을 비공개 결정했다. 조 후보자가 딸의 부정입학 논란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청원 글이 조 후보자와 후보자 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어 비공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현재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학위)취소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20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63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었다.

글쓴이는 “고교생이 2주 인턴 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 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고 적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복 ▲욕설 및 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청원 글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원 글이 비공개돼도 ‘조국 사퇴’ 목소리는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학



‘조국 딸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주세요!’ 글이 비공개 됐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부모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이쯤에서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자녀의) 입시를 경험하신 학부모님들과 여러 정보에 의하면 입시비리가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조 후보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다. 입시를 경험한 학부모들이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고발을 통한 사퇴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전까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제기된 고발은 총 6건이다. 전날 오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각각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 변제 면탈’ 의혹으로 중앙지검에 고발을 접수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靑 “언론제기 의혹, 검증 거칠 것”

‘조국 논란’ 입장 밝힌 청와대
증거없는 ‘가짜뉴스’ 속아내야
청문회서 자료입각해 검증될 듯
김상조 “지금은 불법, 당시엔 아냐”

청와대가 ‘딸 장학금-논문’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입을 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혹제기겠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조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식 의혹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 때 청문위원들이 수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이 위장위훈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윤 수석비서관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날 오전 한국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관련 “지금 (그런 일들을) 한다면 불법”이라며 “(하지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2년 전쯤 (교수들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일종의 품앗이가 문제가 되자) 교육부 차원에서 전 주조사가 이뤄졌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 관련 불공정에 관한 국민정서일 것”이라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한국당, 조국 딸 ‘입시 특혜의혹’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이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지금까지 확인한 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특권을 등에 업고 명문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비집고 들어간 기막힌 일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사회의 공정가치가 완전히 무너진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위축되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검찰의 명예를 위해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2학년 재학시절 한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난 논란이다. 이를 가지고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송도~서울역~남양주 ‘GTX-B’ 5년 만에 예타 통과

사업비 5.7조... 2022년 말께 착공
추진 중인 A·C노선과 시너지 기대
KDI에 민자 적격성검토 여부 신청

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광역급행철도)-B’ 사업이 21일 마침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로 0.33을 받아 고배를 마신지 5년, 노선 등을 바꿔 2017년 8월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뒤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GTX-B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B/C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0.97, 1.0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AHP(종합평가) 점수는 0.516, 0.540이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반영된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

야 하는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경제성 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등 사회·정책적 가치 등

지 반영한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GTX-B는 총 5조 7351억원(3기 신도시 개발 포함 시나리오)을 들여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80.1km 구간(13개 정거장)에 급행 철도 GTX의 노선을 놓는 사업이다.

GTX는 기본적으로 지하 40m 이하 깊이(대심도·大深度)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km,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곧바로 국토부는 이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지, 민간 투자로 진행할지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신청할 예정이다. 철도사업은 필수적으로 민자사업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대상 시설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련 GTX-B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등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

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2년 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GTX-B의 통과로 일단 GTX 3개 노선은 모두 예타의 문턱을 넘었다.

GTX-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은 이미 2014년과 2018년 예타를 통과해 A노선의 경우 작년 12월 착공됐고, B노선은 올해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GTX-B의 경우 2014년 KDI의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가 0.33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후 정부가 노선을 연장하고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으로 힘겹게 예타 관문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GTX-B 예타 통과와 함께 GTX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면, 수도권 광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남양주·구리시 등 교통 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부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앞서 추진 중인 GTX A, 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